

“사회복지는 아직도 후진국이죠”

학 요 일 에

만 난 시 람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 앞장 조홍식 교수

성한용 기자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가 벌이고 있는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National Minimum)은 모든 영역에서의 최저생활 수준을 국민의 권리로 국가에 요구하는 시민운동이다.

지난 9월10일 창립한 참여연대가 최근 전력을 다해 펼치고 있는 이 운동의 중심에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조홍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있다.

지난 주말 저녁 서울 용산역 앞에 있는 참여연대 사무실을 찾아 갔을 때 그는 허름한 방에서 다른 집행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다. 사무실 구석의 자료실에 마주 앉아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사진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자 그는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복지예산 전체 9.6% 그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회의하는 모습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을 무척 쑥스러워 하는 게 틀림 없어 보였는데, 그 이유가 아직 ‘젊기’(42살) 때문인지 아니면 본래 성품이 그런지는 알 수가 없었다.

먼저 운동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연대가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그는 우리나라의 한심한 사회복지 수준을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을 시작했다.

“우리 사회는 아이를 팔아 줄 공공 탁아소가 없고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심을 굶어야 하는 수천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를 중퇴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연금제도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몇 만원의 용돈이 아쉬워 자식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인권을 위한 단체입니다. 인권의 역사는 정치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발전해왔고요. 인권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창립 목적 가운데 하나

이므로 최저선 확보운동은 당연히 우리의 주력사업이 되는 것이죠.”

조 교수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해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데 복지는 후진국”이라고 압축해서 표현하면서 그 근거로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 1백30개 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보험을 내년에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의료보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늦게 출발한데다 대부분의 중진국에서 실시하는 임신부 산전진찰조차 의무화돼 있지 않을 정도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소득 1만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복지예산은 전체의 9.6%에 불과해 60년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다른 나라의 20% 선에도 훨씬 못미친

복지 프로그램 · 예산등 너무 부족

“문민정부 ‘삶의 질’ 오히려 등한시”

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의 복지정책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복지정책이 없었다는 점에서 모두 마찬가지”라고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이와 함께 그는 ‘문민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한 마디를 덧붙였다.

“5공화국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구호로 내걸고 생활보호법 개정,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정 등 형식적이나마 국민복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는 권력의 정당성에 자신이 있기 때문인지 신경제 구호만 외칠 뿐 삶의 질 문제는 오히려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그는 “보건복지부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좋지만 국을 하나 없애고

과도 한 두 개 줄이기로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금은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복지정책을 소홀히 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들 성장에만 관심

그는 무한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이윤체제와 사회복지의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복지는 분배와 할당, 욕구충족 등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며, ‘탈상품화’를 통해 인간 공동체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미래를 생각

하는 역사의식이 필요한데, 정권을 맡은 사람들은 당대에 성과가 나타나면 경제성장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때문에 복지문제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 조 교수의 분석이다.

그에게 경제성장 우선론자들의 일반적인 반론을 던져 보았다. 복지정책을 확대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일하는 의무를 감퇴시키거나 후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반론의 요지였다.

“뭔가 한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정부 예산은 조세에 의해 마련되는데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고 막대한 규모의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경제능력으로 볼 때 조세를 바로 잡으면 충분히 필요한만큼의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겨우 26억 원이면 65~70살의 생활보호대상자 13만 명에게 2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근로의욕 감퇴와 후손의 부담에 대해서도 “예산의 50% 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 나라에서나 걱정할 일”이라고 간단히 받아 넘겼다.

‘공익소송’ 통해 정부 압력

국민생활 최저선 운동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공익소송이다. 참여연대는 내년부터 국민복지와 관련한 각종 소송을 시민운동 차원의 집단소송 형식으로 제기해 정부에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

공익소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는 각종 기금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정부가 국민이나 국회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끌어다가 시설 투자에 쏟아붓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기금이 바닥나고 그 피해는 결국 돈을 낸 가입자들이나 그 자녀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생각이다.

조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연금 가입자 단체가 결성돼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말도 안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사업은 아직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국민들이 경제개발의 이데올로기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무한경쟁시대’를 외치고 있는데 ‘나누고 베푸는’ 복지가 눈길을 끌 수 있겠습니까. 학교교육 내용도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는 쪽으로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와 법률의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여연대를 시작했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복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조 교수는 서울대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민교협 서울대 총무직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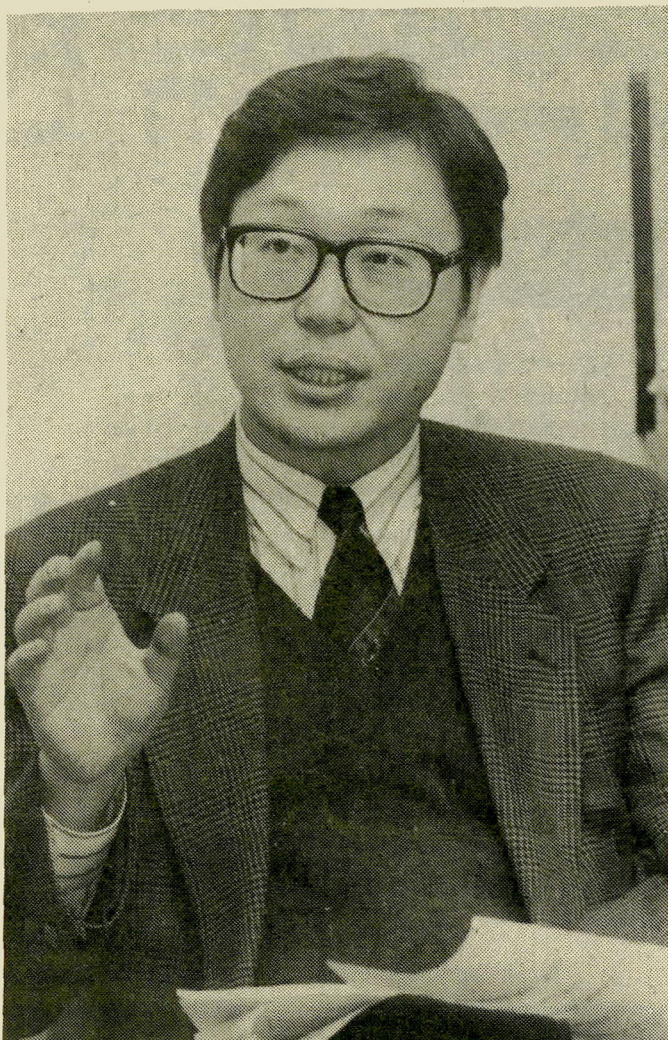


사진 / 박윤섭 기자